

서문

최근 세계정치의 변화는 국제정치학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관심사였던 군사안보나 정치경제의 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문제들에 눈을 돌리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의 기저에는 이 책에서 통칭하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른바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등의 변화로 인해서 세계인들의 삶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커뮤니케이션 변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근대 국제정치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19세기 중후반의 세상에 비해서 서로서로 훨씬 더 많이 알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더 나아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이나 인공위성, 그리고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일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까지도 거의 실시간으로 알고, 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21세기 세계정치는 이렇게 상호 연결되고 상호 소통하는 세상의 변화를 바탕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특별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의 양과 속도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참여하는 양식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이제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다.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들도 면대면의 공동체나 이익 기반의 사회라고 하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독특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정치적 참여의 방식도 바뀌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예전에는 묻혀 버렸을 이야기들이 널리 밝혀지기도 하고, 예전에는 전문가들만이 다루었던 문제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식질서의 변화를 바탕으로 국내외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주체의 성격이 변하고, 이들이 벌이는 국내외 정치의 양상도 변한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모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출현이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이 세계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현실 변화의 속도에 비해서 국제정치학계의 연구는 그리 발 빠른 대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실 오래전부터 국제정치학에도 ‘국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난 십여 년 동안의 현황을 보면 교육이나 연구의 양면에서 모두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나마 진행된 연구들도 다소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성향의 문화 연구로 흐르면서 이 책에서 다룬 ‘커뮤니케이션’의 층위들을 두루 섭렵하지 못하고 옆으로 빗겨나간 면이 없지 않았다.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표방하는 학문분과로서 언론정보학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국제 커뮤니케이션’은 좀 더 인기 있는, 여타 연구 주제들에 묻혀서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왔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시각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성찰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세계정치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는 ‘커뮤니케이션’의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에 담으려는 현상 자체가 여전히 창발하고 있는 미완성의 과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외래어를 굳이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음차해서 사용하는 사정도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부진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보통 커뮤니케이션은 소통(疏通) 또는 의사소통(意思疏通) 등을 번역된다. 물이 흐르듯이 막히지 아니하고 서로 뜻을 통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통의 개념만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모두 다 보여줄 수는 없다. 14세기 말의 불어에 기원을 두는 영어인 ‘communication’에는 ‘정보를 주다’는 의미 이외에도 ‘공유하다’와 ‘참여하다’는 뜻도 담겨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이라고 번역하면 웬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의 내포를 부분적으로만 지칭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소통이라는 번역어가 담아내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의미 중에는 우리가 흔히 공감(共感, empathy)이라고 부르는 커뮤니케이션의 측면도 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정보와 의미를 전달하는 이성적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는 감성적 커뮤니케이션도 있다. 객관적 의미가 통하는 합리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만큼, 마음이 통하는 합정적(合情的)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 최근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이러한 감성의 공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는 미적 정서(aesthetics)나 정체성이라고 하는 좀 더 추상적인 요소들도 작동하고 있음을 주목

해야 한다. 이러한 감성적이고 미학적인 요소들은 이성적 변수들 못지않게 커뮤니케이션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에 대한 고민은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범위와 층위에 대한 고민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실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미디어와 기술, 정보, 지식에서부터 문화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 걸쳐 있다. 부연컨대, 좁은 의미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정보를 소통하는 이성적 커뮤니케이션과 이것이 이루어지는 채널로서 미디어와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만드는 기술과 지식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감성의 공감, 미적 정서의 교감, 문화와 문명이라는 콘텐츠,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에 대한 연구까지도 포괄한다. 이 책의 연구가 기존의 미디어 결정론 또는 기술 결정론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그 반대편의 사회결정론의 시각을 넘어서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다층적 분석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분석틀에 입각해서 보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층위에 대한 복합적 접근을 펼쳐야 한다. 특히 좁은 의미의 커뮤니케이션 층위와 넓은 의미의 커뮤니케이션 층위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부상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부상이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탐구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주류 국제정치이론이 상정해 왔던 이론적 전제들을 넘어서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부상은 세계정치 권력 메커니즘의 변환,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 그리고 새로운 세계질서의 모색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부상은 세계정치의 권력 메커니즘이 변화하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사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부상은 중립적인 과정이 아니고 비대칭적인 권력 현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되는, 이른바 커뮤니케이션 권력은 21세기 세계정치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미디어로 대변되는 커뮤니케이션 변수의 역할이 커졌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권력은 기존의 자원권력의 잣대만으로는 잘 파악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권력은 정보와 감정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흐름의 권력’이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네트워크를 전제로 하는 ‘네트워크 권력’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어느 행위자가 지닌 고정된 자원이나 주어진 속성으로 환원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권력은, 지배권력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대항권력에 대한 논의에 주는 이론적 시사점도 매우 크다.

둘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부상은 세계정치에서 새로운 행위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는 국가 간 관계라는 의미의 ‘국제(國際,

international)’의 잣대만 가지고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즉 이는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들이 선두를 달리는 종류의 게임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1세기의 맥락에서 ‘국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는 다소 식상하다. 오히려 그 범위가 ‘국제’를 넘어서 전지구로 확장된 ‘지구(global)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다. 실제로 국가 단위로 작동하던 매스 미디어의 지구화로 인해서 등장한, 다양한 지구 미디어의 존재는 국가를 단위로 커뮤니케이션을 사고하던 발상을 무색케 한다. 인터넷 미디어의 확산은 이러한 현상을 부추긴다. 그러나 국가 행위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의 과정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의 짝으로 ‘국제’나 ‘지구’보다는 ‘세계’(世界, world)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20세기 들어와서 사용되기 시작한 세계라는 말에는 ‘국제’라는 표현이 설정하는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 ‘지구’라고 하는 공간적 확장의 의미가 동시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행위자들의 권력게임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연결된다. 기본적으로 새로이 모색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질서는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지배질서의 정교화와 공고화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냉전 시대의 군사안보나 무역금융 영역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패권질서의 모습은 아니다. 또한 1980년대 제기되었던 신세계정보커뮤니케이션질서(NWICO) 운동과 같은 대항질서에 대한 논의로의 회귀라고 볼 수도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커뮤니

케이션 분야에서 나타나는 세계질서는 지배질서와 대항질서의 모색이라는 두 가지의 추세가 경합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인터넷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색 움직임을 보면,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행사되어온 민간 사업자와 민간기구의 주도권에 대해서 국가 행위자들과 정부 간 국제기구들이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사실상 메커니즘에 대한 법률상 메커니즘의 대립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합과 대립의 이면에는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려는 유럽과 중국, 그리고 개도국들의 속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새로운 질서 모색 과정에는 복합적인 연합의 구도가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세계 정치의 이론적 논제를 반영하는 경험적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21세기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를 다양한 행위자들이 벌이는 새로운 권력게임으로 인식할 경우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들을 선별하였다. 서양 학자들의 시각이 아닌 동아시아 학자들의 시각에서 본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려는 것이 가장 큰 취지 중의 하나였다. 이렇게 선정된 주제들은 앞서 제시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다층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인프라, 정보, 제도, 문화, 권력, 정체성, 행동의 일곱 개 층위로 나누어 집필되었다. 각 장의 필자들이 탐구한 주제들의 공통분모를 추출하자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부상이 권력, 주체, 질서의 세 가지 차원에서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1장의 “냉전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정보기술의

국제정치적 구성”은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의 ‘인프라’를 이루는 인터넷의 구조를 탐구하였다. 특히 오늘날의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만들어진 국제정치적인 과정에 주목하였다. 인터넷은 매우 분산적인 커뮤니케이션 경로와 이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라는 집중의 관리방식이 결합된 이중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1장에서 주목한 것은 이러한 인터넷의 구조와 국제체제의 요소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문제였다. 제1장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이중적인 구조는 냉전체제라는 제약 속에서 만들어진 미국 핵전략의 기술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구상되었다. 이러한 기술적인 필요는 이중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갖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개발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동시에 이 개발과정은 정보기술체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속성에 의해 다시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상호영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1장은 1950년대 반자동지상환경(SAGE: Semi-Automatic Ground Environment) 대공방어체계 개발과 1960년대 ARPANET 개발을 구체적인 사례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에 담긴 인터넷의 이중적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냉전의 국제체제, 미국의 전략적 필요, 정보기술의 속성이라는 삼자의 구성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출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제2장의 “ICT 교역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의 기반을 이루는 ICT 교역의 과정에서 ‘정보’라는 변수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었다. ICT 기반 경제에서는 한 국가 영토 내에서만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

존의 규제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이 요구된다. 새로운 경제에는 자본, 노동과 같은 기존의 생산요소보다 정보(또는 데이터)의 생산, 축적, 관리, 유통 및 사용이 더 중요해졌다.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SNS, LBS, 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은 모두 개인정보의 활용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 기반 경제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국가 간 규제의 조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의 ICT 교역과 관련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인터넷 기반 교역의 세계질서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장은 ICT 기반 서비스 교역의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정보의 상업적 유통 및 국가 간 이동을 둘러싼 미국과 EU의 입장을 비교분석하고 ICT 교역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향방을 가늠하였다.

제3장의 “전자정부와 정부개혁: 미국과 중국의 사례 비교분석”은 인프라의 형성이나 정보의 교류라고 하는 좁은 의미를 넘어서 ‘제도’라고 하는 변수가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에 던지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제3장이 주목한 사례는 ICT가 정부 부분에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전자정부 사업과 정부개혁의 문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자정부 모델 경쟁에 주목하였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자정부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제3장이 착안한 부분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국과 중국의 국가별 차

이다. 이러한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제3장은 기술결정론의 시각을 넘어서 사회구성론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자정부 관련 핵심 정책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전자정부가 각국의 정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전자정부의 도입은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관계를 촉진시키고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전자정부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감독 및 관리 하에 두며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에서 나타나는 접근방식의 차이는 단순한 전자정부 사업상의 차이를 넘어서 정부개혁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의 경쟁을 벌이는, 넓은 의미의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의 과정으로 해석된다.

제4장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세계정치”는 ‘문화’를 단위로 해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동학을 이론적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최근 지구화와 교통·정보통신 수단의 발달, 국제적 인구 이동의 증가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 간접적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정치에 있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4장은 이처럼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양상이 세계정치에 대해 갖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제4장이 주목하고 있는 바는 문화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의 이론적 유형화 작업과 거기서 도출되는 국제정치학 일반에의 함의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문화 개념과 탈냉전 이후 문화의 정치적 중요성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

탕으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지배’, ‘충돌’, ‘공존’, ‘공진화’, ‘혼종화’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의 양상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제6장은 문화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정치가 행위자와 이슈 측면에서 더욱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제4장이 주장하는 바의 요지는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문화라는 변수를 자원과 축적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계와 흐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있다.

제5장의 “국제정치경제의 변화와 미디어 지구화론”은 21세기 세계정치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화 교류가 단순한 중립적 현상이 아니라 ‘권력’의 메커니즘이 개입된 현상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기존의 생경한 문화제국주의론을 넘어서는 이론들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종속이론과 마르크스주의의 논의에 기반을 둔 문화제국주의론은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의 문화와 미디어 콘텐츠가 제3세계 주변국가의 지역 문화를 말살하고 전지구적인 문화적 동질화를 낳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990년대 이후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도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해석, 문화이식론적 시각, 문화수용에 대한 무관심, 자본주의 체제의 복잡성과 기술변화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문화제국주의론에 제기된 주요한 비판들이었다. 최근 들어 문화제국주의론의 지배와 종속의 문제들을 벗어나 미디어 지구화 과정을 이해하려는 새로운 이론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특징으로는 미디어 지구화에 대한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해

석이나 지배와 종속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의 배제, 미디어 지구화의 경제적 함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문화수용의 조건 등 사회문화적 변인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미디어 지구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공간 개념의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은 기존 미디어 지구화론들이 노정한 정치적 과잉의 오류나 구조적 결정론의 문제를 극복케 할 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같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에 일어나는 미시적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론적 의의가 있다.

제6장의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민족주의 비교연구 서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정체성’이라고 하는 변수가 어떻게 세계정치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 공간에서 발견되는 민족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과 한국의 민족주의는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서구 및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시발되었으며, 2차 대전 이후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공세적 민족주의로 발전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사이버 공간에서 공세적 성격을 띤 민족주의적 담론이 형성되어 동원의 기제로 작용하게 되었다. 인터넷상의 여론이 언어를 경계로 칸막이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1990년대 이전의 사이버 민족주의가 주로 불만을 표현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여론을 동원하는 기제로 사용되었다. 영토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다오위다오 문제나 한국의

독도문제에 대한 논쟁은 사이버 공간을 달구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도 양국의 민족주의적 정서와 감정이 표출된 사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의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하는 조선족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소통적 민족주의의 가능성이 탐색되고 있다. 이렇게 초국적 범위에서 형성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 단위의 민족주의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것은 21세기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 연구의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제7장의 “커뮤니케이션, 초국가적 공론장, 그리고 초국가적 연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를 중심으로”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부상이 단순한 정보나 문화 또는 정체성의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되는지의 문제를 탐구하였다. 제7장이 주목한 것은 ‘담론(또는 공론)’이라는 변수가 초국적 환경에서 벌어지는 세계정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공론장 논의를 초국적인 차원에서 재구성한 최근의 논의들을 검토하고 있다. 초국적 공론장의 이론은 일국 단위를 넘어서 새롭게 형성되는 정치공동체의 참여민주주의를 향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러한 초국적 공론장 이론은 동아시아의 초국적 연대 네트워크의 역할과 공동체 정치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에 귀중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제7장은 경험연구 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네트워크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사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민국가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동아시아 지역정치의 공동의 문제이다. 이러한 인

식을 바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네트워크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초국적으로 형성하는 네트워크형 연대체로 개발하여 전쟁과 여성인권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모색은 동아시아에서 지역단위 거버넌스의 부재와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각국의 시민들에게 대항의 공론장을 제공하고 초국적 시민 연대를 통해서 젠더의 규범과 국제법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요컨대, 이 책에 실린 일곱 편의 논문은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 연구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와 동시에 향후 이 분야 연구의 방향설정에 대한 지적도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본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의 연구주제가 될 만한 소재는 많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기치로 열렸던 촛불집회나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규명을 위해서 벌어진 인터넷 상의 논쟁의 경우를 보면, 그 자체는 무역과 안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기저에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의 색채가 강하게 깔린 주제들이다. 이밖에도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분쟁, 글로벌 한류 열풍으로 대변되는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진출, 소셜 미디어가 전통적인 외교정책이나 공공외교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색 움직임, 글로벌 정보격차를 해소를 위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 커뮤니케이션 주권이나 커뮤니케이션 권력 또는 커뮤니케이션 패권 등과 같은 개념적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의 현실이 창발하는 만큼 커뮤니케이션 세계정치 연구의 주제들도 계속 창발할 것으로 예견된다.

김상배